

“37점짜리 국회, 싹 물같이해야”...국민은 냉엄했다

[21대 총선 1차 여론조사]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일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조차 정치권의 치열한 개정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총선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향한 날카로운 민의(民意)는 안갯속을 뚫고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가인 '엠브레인'과 함께 총선 여론조사를 기획했다.

20대 국회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시작으로 2030세대 및 권역별 심층조사 등 다양한 관점과 분석들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는 2020년 유권자들의 생생한 표심을 전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돕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41% “현 지역구 의원 불신임”...85% “중폭 이상 교체를”

국정안정 57%>정권심판 30%...“다당제 의견” 엇갈려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담했다. 100점 만점에 평균 37점에 그쳤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대폭 물같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을 정도로 ‘쇄신’에 대한 욕구가 컸다.

다만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론보다는 국정안정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36.94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세대·지역·이념성향을 불문하고 낮았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은 ‘여야 협력’이

37.8%로 가장 많이 꼽혔고, 국민과의 소통, 지역현안-민생돌보기, 입법노력 순으로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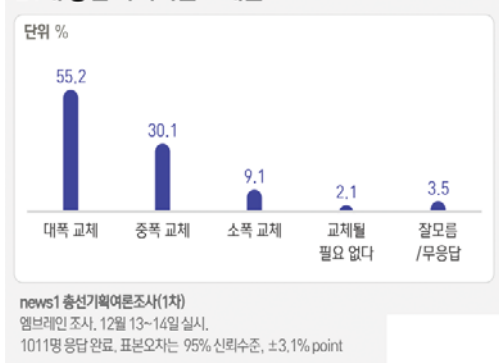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21대 총선 투표 의향 조사에도 반영됐다.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이 81.4%,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답이 11.5%로 국민 10명 중 9명(92.9%) 이상이 투표 의향을 보였다. 실제 투표율은 이보다 낮겠지만, 총선을 4개월 앞둔 국민의 뜻은 ‘한 표 행사’를 통한 정치권 새판짜기였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중폭 교체’ 응답 30.1%를 합하면 중폭 이상의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는 85.3%를 차지했다. 국민 7명 가운데 6명은 중폭 이상의 현역 의원 ‘물같이’를

20대 국회 평가



21대 총선 국회의원 교체율



원한 것이다.

응답자의 지역구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는 100점 만점에 48.32점으로 20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뽑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로, ‘아니다’라는 불신임 답변(40.9%)보다 조금 높았는데,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가가 전체 의원에 비해 후한 점을 감안하면 불신임 답변 40.9%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평가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평가는 52.11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평가는 43.81점으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평가가 다소 높았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선임 응답은 54.9%, 한국당 의원에 대한 재선임 여부는 44.6%였다.

내년 총선의 의미에 대해선 국정안정론이 57.0%로 정권심판론(30.1%)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당(21.0%), 정의당(10.9%), 바른미래당(5.8%), 우리공화당(0.4%), 민주평화당·민중당(0.3%), 기타 정당 1.5%, 없다·잘모르겠다 유보층은 25.5%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쇄신을 진행하거나 계획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가

장 쇄신을 잘하고 있는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25.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답이 각각 38.8%, 8.0%로 아직까지 정당별 쇄신 작업이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당체제 선호도 조사에선 ‘다당제 강화’가 33.0%, ‘양당체제 회귀’ 29.8%, ‘다당제 유지’ 26.0%였다.

특히 이념성향상 보수층일수록 양당체제를, 진보층일수록 다당제 유지·강화를 선호해 눈길을 끌었다.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여타 야당들로 구성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데 대한 양 진영의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유선RDD,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표본을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조사 30.1%·무선전화조사 69.9%)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8%(유선 10.8%, 무선 17.5%)였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셀 가중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윤호 기자

제24회 땅끝해남
**해남이
히기맛이 축제**
2019. 12. 31. 화 ~ 2020. 1. 1. 수
해남 땅끝 관광지 일원

해남이행사·새해맞이 카운트다운·달집 태우기·해맞이·무대공연·떡국 나눔시식·2020 해남방문의 해 점등식

화원 오시아노 해남이 행사
2019. 12. 31.(화) 15:00~18:30
오시아노 관광지

복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
2020. 1. 1.(수) 05:00~08:00
오소재 소공원

해남군



‘좌초 위기’ 광주 중외공원, 기사회생

광주 도시계획위 소위원회,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안 가결

아파트 부지 변경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광주 ‘중외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결되면서 기사회생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외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도시계획위 소위원회는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안을 놓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표결해 3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외공원은 그동안 아파트 부지 변경을 놓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 관련 단체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광주시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거버넌스’는 애초 입찰제안서에서 중외공원의 아파트 부지를 북구 양산동 하서로 원편으로 잡았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서 해태제과 광주공장까지 이어지는 하서로 원편과 호남고속도로 사이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짓

는 안이었다.

영산강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아파트 부지가 고속도로, 본촌산단 등과 가까워 소음과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녹지축과 분지맥이 훼손되며 아파트 부지를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옮기라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지정문화재가 있는 박물관 옆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원안대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영산강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시는 민간거버넌스 자문을 거쳐 당초 안에서 녹지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만들었다. 애초 공원부지에 950가구, 국립박물관 오른 편에 1600가구를 짓는 안이었다.

민간거버넌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했고 시와 영산강청이 마련한 절충안은 지난 10월23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절충안이 가결되면서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